

# 전남·광주 다시 하나로... 분리 이후 40년, 통합론 역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전남과 광주가 행정구역 분리 40년만에 다시 하나가 된다.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왔던 시·도간 통합 논의가 '3전4기' 만에 결실을 맺기까지 그 경과를 살펴봤다. 전남과 광주는 고려 현종 때(1018년) '전라도'라는 명칭이 처음 생겨난 이후 1896년 전라도·북도로 나뉘고, 다시 분리되기 전까지 1000년 가까이 한 지방 아래 살았다.

'한 뿌리'였던 광주와 전남은 1986년 11월 1일 광주가 대도시로서 급격히 팽창,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다.

'한 지방 두 가족'으로 지내던 광주·전남이 "다시 합치자"며 통합론을 꺼내든 건 모두 4차례.

첫 번째 통합론은 시·도 분리 10년여 만에 나왔다.

1994년 말, 마지막 관선 단체장이던 당시 강은태 시장과 구용상 지사가 정부의 시·군 통합 정책(도농복합시 출범)에 맞춰 통합 논의를 처음 꺼냈다.

이듬해 민선 1기 강 시장과 허경만 지사도 통합 추진에 나섰으나 끝을 맺지 못했다. 도청을 무안 남악으로 옮기려는 전남도와 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광주시의 입장이 엇갈리며 1995년 12월 최종 무산됐다.

이 무렵 광주 동구 관산동 전남도청을

### 1000년여 '한 지방'...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분리 1995년 이래 3차례 통합론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 정부 재정 지원 업고 특별법 입법...3전4기 재통합

전남으로 옮기는 이전 사업이 본격화됐다. 광주 도심 발전의 중심축이자 호남 정치 1번지로서의 상성을 가진 도청 이전은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2차 통합 논의는 2001년 고재우 시장과 허 지사가 수도권 집중화와 호남권 위상 하락을 이유로 통합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통합추진체까지 꾸렸으나, 이번에도 도청의 전남 이전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백지화됐다.

결국 2005년 도청이 무안 남악 현 청사로 옮기며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전남도청 이전이 20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동시에 통합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세 번째 통합론은 2020년 다시 불거졌다. 같은 해 9월 10일 이용섭 시장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대응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전략적 협력 등이 재논의의 계기가 됐다.

전남 역시 호응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심화, 수도권 집중, 경제·산업 동력 약화로 인한 장기 침체, 지역경쟁력 상실과 삶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의 연속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시·도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합의문을 내고 특별법 연구용역까지 진행했으나, 광주 일부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고 정부의 지원 부재 속에서 동력을 잃었다. 결국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네 번째 행정통합 논의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원 의지에 힘입어 시작했다. 김 지사가 신년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구성을 발표하며 네번째 통합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어 김 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새해 벽두 올해 1월 2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열흘 만인 1월 12일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꾸렸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4년 간 20조 이상'이라는 과격적 재정 지원을 분명히 했다. '서울특별시' 위상



지난 1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법 시행을 위한 특별법이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와 시도민 순회 공청회를 거쳐 1월 3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며 특별법안은 5편·13장·3절·408개 조문·16개 부칙으로 구성됐다. 특히 특별법의 핵심이자 통합특별법 시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특별법안은 전남인 3월 1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며 행정통합 논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3개월여 뒤인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이 뽑히고 7월 1일 통합특별법이 공식 출범한다. /뉴스1

##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통과... 초광역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 재정·산업·투자 권한 대폭 확대... 국가 균형발전 핵심 거점 부상

전남도와 광주시를 하나의 광역정부로 묶는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행정과 경제 구조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재정 특례와 산업 육성 권한, 규제 완화, 투자유치 지원,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훨씬 강한 권한을 갖는 초광역 자치정부로 출범한다.

◇국가가 재정 책임...통합특별법 안정성 확보

특별법은 통합특별법 출범 이후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통합 이전 전남도와 광주시가 받던 재정지원 수준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등 통합 초기 재정 불안을 차단했다.

국가사업 추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점도 특징이다.

◇지방재정·세출 자율권 확보...재정 자치 시대 개막

통합특별시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넘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지방세 역시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정책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훨씬 높은 재정 자율성이 확보되는 셈이다.

◇균형발전기금 신설...전남·광주 격차 줄인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 내부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기금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생활권 연계사업, 협력사업 추진 등에 사용된다.

도시 중심의 광주와 농어촌 중심의 전남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 될 전망이다.

◇산업정책 권한 대폭 확대

통합특별시는 산업정책에서도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와 신기술창업집

◇기업 이전·투자 유치 과격 지원

특별법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재정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도 상당하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도 가능해진다. 투자환경 전반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됐다.

◇노후산단 재편·에너지 전환 본격화

통합특별시는 노후 산업단지를 이전하거나 재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기업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도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구조개편과 탄소중립 전환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융회사 설립 가능

통합특별시는 정책펀드 운용과 전략사업 투자를 위한 투자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 설립도 가능해 지역 개발사업과 신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사실상 투자기관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특별법은 통합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도 가능해진다.

통합특별시는 별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공동복지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뉴스1

##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시행 7월 출범... 어떻게 달라지나

### 예산·인사 독립성 강화...대표성 확보는 과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시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재편된다.

특별법은 통합 이후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예산·인사 운영 방식까지 별도 특례로 규정해 초광역 의회에 걸맞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했다. 단순한 의회 합안이 아니라 권한과 운영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변화를 담아 놓은 것이다.

특별법 제25조는 통합특별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통합특별시의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통합 이후 하나의 광역의회로 통합된다.

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기존 광역의회와 유사하지만 통합특별시라는 초광역 단위의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의회사무기구 운영에도 특례를 줬다. 지방자치법상 기준과 달리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위원 수와 사무직원 임용·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직 규모와 정책 수요에 맞춰 의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 조치다.

통합특별시장이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시 의장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 집행부의 일방적 인사 운영을 견제하도록 했다. 의회 인사·조직의 실질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셈이다.

예산 분야는 변화의 폭이 크다. 통합특별시의회 예산은 독립해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의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집행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시장이 의회 세출예산을 감액하려 할 경우 사전에 의장 의견을 구하고 감액 사유를 명시해 통보하도록 했다. 의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 권한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 장치로 풀이된다. /뉴스1

제 27회 — 구례에 피어하는 노란 설렘

# 구례산수유꽃축제

초대장  
구례 산수유꽃 축제

산수유가 깨우는 봄, 그 찬란한 시각  
당신을 초대합니다

---

**2026. 3. 14.(토) - 3. 22.(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

---

**개막식**

**일시 : 2026. 3. 14.(토) 오후 3시**  
**장소 : 산수유꽃축제 상설무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상관길 45)

● 손태진과 함께 ~

주최/주관  
구례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Gurye Sansuyu Flower Festival Promotion Committee

후원  
전라남도 Jeollanamdo  
구례군 GURYE County